

30년 만에 대대적 조직 개편 업무 다변화 따라 새 틀 마련

근로복지공단, 창립 30주년
업무상질병국·퇴직연금국 신설
예산 10조·인력 1만 명 체제 돌입
플랫폼 종사자 등 복지 사각 해소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근로복지공단이 확대된 업무와 새로운 비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새롭게 도약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4일 울산 본부에서 공단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공단 30년의 발자취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30년을 향해 새로운 비전으로 비상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5월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출발했으며, 지난 30년간 수행 사업과 조직 측면에서 양적·질적 발전을 이뤘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과 가입자 수는 설립 당시 18만 개소, 790만 명에서 2024년 말 300만 개소, 2142만 명으로 증가했고, 산재보상 규모도 수급자 수 13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보상금액은 1조원에서 7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 산재보험 외에도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사업, 퇴직연금 등 공단의 사업이 계속 확장돼 현재는 14가지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중이다.

공단 초기 조직은 47개 기관 1195명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본부와 전국 136개 소속기관에서 1만54명이 근무하고 있고, 연간 예산은 10조6000억원 규모로 중정부기관 중 두 번째로 큰 조직



근로복지공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조직개편을 통해 새롭게 도약한다.

/근로복지공단

이 됐다.

박종길 이사장은 취임 후 공단의 다양한 업무와 큰 규모에 걸맞으면서 정체성을 재확립할 수 있도록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라는 새 희망비전을 수립했다.

산업재해와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 속에서 노동보험으로 일터에 인심을 주고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생활에 안정을 줘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지키고 키워준다는 의미다.

이런 희망비전 실행을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 내달 1일부터 업무상질병국, 퇴직연금국, 안전윤리경영본부 등을 신설해 가동한다. 급증하는 업무상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

연금 확산을 적극 수행하면서 안전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지향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설립목적과 사업범위 명확화 등 공단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법' 제정을 추진하고,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도 포용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도 확대한다.

박종길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청년의 절정인 서른살을 맞이해 '가장 푸르게, 더욱 뜨겁게'라는 슬로건을 정했다"며 "이 슬로건처럼 공단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일하는 모든 분의 진정한 행복 파트너로 다시 한번 도약하고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김대자 “1분기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대”

국표원장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해외 기술규제로부터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24일 서울 옐타워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3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정부서한과 다자·양자 협의와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며 인도의 톨루엔 품질명령의 시행 유예 등 63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유럽연합의 스마트폰 간 무선충전 기능에 대해 에코디자인 에너지효율 검사 대상 제외 등 12건의 수출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역 상대국의 과도한 규제나 급박한 시행일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전,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수출기업과 협·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 동향에 대한 주요사항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를 논의했다.

참석기업들은 회의에서 ▲튀르키예의 비도로운 이동기계 수입검사 시 규정된 문서 외 추가자료 요구 ▲인도네시아의 급박한 철강인증 시행 ▲베트남의 리튬배터리 검사 대상 확대(안전→안전·성능검사) 등 국가별 산업별 애로를 전달하며, 상대 정부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대자 국표원장은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한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지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다른 나라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 발굴하고 적극 해소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코트라 “칭다오, 중시장 진출 교두보”

中 칭다오서 소비재 수출상담회 개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23일 중국 칭다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25 인천시 소비재 기업 칭다오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인천시 소재 소비재 중소기업 15개사가 참가해, 중국 전역 유망 바이어 30여개사와 1대1 상담을 진행했다.

코트라는 국내외 전문인력을 통해 사전에 계약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를 초청해 매칭함으로써 상담 효율성을 높였다.

수출상담회와 연계해 참가기업 제품을 전시하는 오프라인 쇼케이스와,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왕홍)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마케팅도 추진했다. 특히, 글로벌 숏클립 플랫폼 '중국판 틱톡' 더우인(Douyin)과 협업한 '중국 온라인 유통망 진출 전략 설명회'도 마련됐다.

참가 기업들은 또 '칭다오 자유무역 구역과 '콰징 판매센터'를 견학하고,



코트라는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23일 중국 칭다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25 인천시 소비재 기업 칭다오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상담장 현장의 모습. /코트라

현지 기관과의 간담회에도 참석하는 등 중국 시장 구조와 유통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현장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황재원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칭다오는 한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우리 소비재 기업의 중국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베트남산 스테인리스에 최대 18.8% 관세

제459차 무역위원회, 6개 안건 심의
덤핑수입으로 韓 산업 실질적 피해
향후 5년간 11.37~18.81% 부과

정부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제459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했다.

이에 따라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아황산소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다 제품에는 15.15~33.97%, 파티클보드 제품에는 11.82~17.19%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장관에 건의한다.

무역위는 또 중국산 PET 필름 중간재심사에 대한 조사 개시를 보고 받았다. 이번 조사는 해당 제품에 대해 지난 2023년 5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으나, 최근 수입물량 증가, 수입단가 인하 등 상황변화로 인해 덤핑조사 대상 기간이던 2021년 대비 2024년 기간 중 덤핑률이 높아진 것

으로 의심돼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기업 4개사가 중국 천진완화·강웨이를 상대로 덤핑률 재심사를 요청해 진행됐다.

무역위는 앞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실제로 덤핑률이 높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인 2028년까지 수정된 덤핑률 적용을 기재부장관에 건의할 수 있다.

이밖에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와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고,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은 양당사자의 조사신청 철회를 수용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9월 조사 개시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 건은 현재 21.6%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이며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최종판정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남부발전, 환경개선 아이디어 공모

6월 13일까지 참가 신청 접수

한국남부발전이 발전소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친환경 기술개발과 지역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제2회 KOSPO 환경개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ALL Together Project)'을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응모분야를 미세먼지 감축에서 환경 전 분야로 확대하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총 예산도 증액했다. 지난해 공모전에서 '미세먼지 감축

식물 보급' 등 총 6건의 우수작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더 혁신적이고, 폭넓은 제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상 최악의 산불피해를 입은 하동, 안동 등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 아이디어를 우선 채택할 예정이다.

공모전 참가 신청은 남부발전 홈페이지(www.kospo.co.kr) '국민 생각함'에서 가능하며, 개인 또는 단체가 ▲주변지역 환경복지 개선 ▲친환경 기술개발의 2개 부문에 대해 횡수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